

금융개혁의 방향과 영향분석

강 석 훈(대우경제연구소 금융팀장)

1. 금융개혁 논의의 배경

(1) 민간주도 금융시대의 서곡 : 금융 개혁위원회

금융개혁위원회가 발족되고 거의 매일 각종 금융 시장 및 금융산업에 관한 개혁조치들이 발표되고 있다. 사실 우리 금융은 과거 정부주도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정부가 추구하는 거시경제정책 또는 산업정책을 지원하는 도구로 이용된 경우가 많았고 이에 따라 금융 본연의 기능은 상당부분 왜곡되어 왔다.

즉 금융부문이 자율적인 판단하에 효율적인 자금 배분과 효과적인 감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그 기능을 상당부분 정부의 지시 및 통제, 규제에 따라 수행하여 왔다.

금융산업이 정부주도에 의해 발전되고 금융기관이 정부의 규제에 따라 움직이는 시스템은 과거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이 빈약하고 경제발전의 정도가 미약한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경제나 금융규모는 더 이상 정부가 모든 걸 알고 지시하고 처리하기에는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커졌을 뿐만 아니라 경제주체들의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또한 정부라는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정보기술의 발달과 대외개방 확대에 따라 대내외 환경변화가 매우 급속하게 변화하는 상황하에서는 중앙집권적인 정부기능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경제발전과 성숙화의 주체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전이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는 정부주도의 금융이 민간주도의 금융으로 전환되는 금융개혁은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2) 한국금융의 현주소

금융개혁을 논의하기에 앞서 우리금융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중앙은행의 기능부터 살펴보자. 원래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적절히 공급하고 통제함으로써 화폐가치의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의 많은 부분이 정부의 산업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분야나 산업에 자금을 지원을 하는 도구로서 이용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의 통화공급 조절능력은 저하되고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가지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경제발전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금융산업의 경쟁력도 국제수준과 비교하여 볼 때 매우 미약하다.

예를 들어 국가별 상위 10대 은행의 歲前 총자산

수익률을 보면 94년의 경우 미국은 1.51%, 영국은 1.20%인 반면 한국은 0.62%에 그치고 있다. 또한 94년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수익률은 7.64%에 그친 반면 외국생보사와 외국생보사의 한국 지점들은 각각 8.45%, 11.75%를 기록하여 국내회사보다 월등히 앞선 자산운용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기업의 절대적인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러한 기업활동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의 규모도 커져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 자체로 볼 때에도 규모의 경제나 범위의 경제 이익을 향유할 수 있으려면 규모가 커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기관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6대 시중은행 자본금의 합을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의 매출액으로 나눈 비중을 보면 85년에는 40.9%였으나 90년에는 36.8%, 95년에는 26.3%로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국가별 은행의 평균자본금을 비교해 보더라도 95년의 경우 국별로 세계 1,000대 은행에 포함되는 은행들의 평균자본금은 한국을 1이라고 할 때 미국은 1.46, 영국은 2.40, 프랑스는 4.55를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의 경쟁상대국인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2.38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국가별로 상위 4개 증권회사의 평균자산 규모는 한국이 1이라고 할 때 일본은 16.5, 미국은 70.2에 달하고 있다. 우리 금융기관들의 규모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신설생보사를 포함한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부실화되어 있으며,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이 공급자 중심으로 세분되어 있어서 금융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우며, 또한 금융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과다하여 금융시장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官治금융 또는 政治금융이 관행화되어 있는 등 다양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

(3) 대내외 환경변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내외 금융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각국은 자국의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 완화와 다양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미 지난 96년에 OECD에 가입함으로써 그동안 준비해왔던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의 대외개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동안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외국인의 주식투자도 금년부터 매년 3%씩 한도가 확대되어 3년 후에는 한도가 아예 폐지될 예정이다. 그동안 거의 개방이 되지 않았던 채권시장도 금년부터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무보증 장기채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개방될 예정이다. 다만 채권시장과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매우 조심스럽게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금융시장이 외국인에게 개방될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도 거의 전면적으로 개방될 예정이다. 보험산업 및 증권 관련산업의 대외개방에 이어 은행의 경우에도 98년 이후에는 외국인에 의한 현지법인 설립이 허용될 예정이다.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이 국내외를 넘나드는 거대한 자본력을 배경으로 뛰어난 경쟁력을 가진 외국 금융기관들의 각축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한국경제의 고성장시대의 종말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대내외 금융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금융개혁은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절대절명의 과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4) 외국의 금융개혁과 시사점

금융개혁이 일어나는 형태나 動因은 국가에 따라 다소 상이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금융기관들이 자신

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규제를 회피하려는 과정에서 새로운 금융 신상품을 개발하기 시작하였으며 금융당국이 이를 전향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금융혁신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금융개혁 과정은 일시에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30여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기본적인 방향은 금리자유화와 금융기관의 겸업화 확대, 금융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건전성 감독의 강화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점진적인 금융혁신과는 달리 급격한 방식을 택한 금융개혁은 지난 86년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소위 빅뱅이라고 불리는 영국의 금융개혁은 주로 증권시장에 대한 개혁이었으나 그 파급효과는 금융산업 전반을 걸쳐 나타났다. 당시 영국의 금융은 각종 규제와 오래 지속된 관행속에서 경쟁의 무풍지대로 존재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금융혁신 등에 영향을 받아 런던 금융시장의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어 과거부터 지속해오던 국제금융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 영국수상이었던 대처는 업계관련자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증권매매 수수료율의 자율화, 런던 증권거래소 회원의 대외개방 등 증권산업의 기반을 뒤흔드는 개혁을 일시에 추진하였다. 이후 런던시장은 최소한의 규제와 각국 금융기관들의 자유로운 경영혁신 과정을 통해 다시 세계금융시장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빅뱅은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영국의 주요 금융기관들이 외국의 대형 금융기관에 인수 합병되는 등의 부작용을 겪기도 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도 작년 11월 하시모토 수상이 일본판 빅뱅 구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일본의 금융기관들은 지난 80년대 후반 버블경제의 붕괴이후 막대한 부실채권 문제에 봉착해 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일본의 은행과 협동조직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 규

모가 96년 3월말 현재 총대출금의 4.9%인 34조엔에 이르는 수준이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큰 부실채권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일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는 일본 금융기관의 대외신용도를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침체상태에 빠져있는 일본경제의 회생을 가로막는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시모토 수상의 개혁안은 자유(free), 공정(fair), 국제화(global)의 기본원칙하에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완화, 금융감독 체계의 정비, 국제화시대에 맞는 금융제도 확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와 금융환경이 비교적 비슷한 일본의 빅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과를 내올지는 지속적으로 주목할만한 일이다.

2. 금융개혁의 주요 이슈들

(1) 금융개혁의 기본방향

이러한 대내외 환경하에서 지난 1월 대통령은 금융개혁위원회(이하 금개위)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광범위한 금융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곧이어 각계의 다양한 금융전문가와 금융수요자를 중심으로 금개위가 출범하게 되었는데 금개위는 우선 금융개혁의 과제를 단기·중기·장기과제로 구분하여 발표하였다. 이 방안에 따르면 단기과제는 금리인하, 대출관행 개선, 각종 금융 규제완화 등으로 오는 3월 말까지 방안을 마련하여 상반기 중 즉시 시행하도록 하였다.

2단계 중장기 과제는 법규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리스·신기술 금융·할부금융·팩토링 등 여신 전문기관의 영역통합, 투신사의 증권사 전환 후 투자는행업무 부여, 은행·증권·보험간 상호 업무진출 등으로 6월말까지 방안을 마련하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다. 3단계 구조개혁 과

제는 대기업의 은행지배 등 소유구조 문제, 은행 인수합병, 통화관리 및 감독기능 개편, 자본자유화의 가속화 등으로 97년 9월말까지 마련하여 98년 국회에 회부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총체적인 계획아래 분야별로 5개의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제1분과에서는 금융의 공공성 제고부문을 다루게 되는데 통화가치의 안정과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에 필요한 통화관리제도 개선,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개선 등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제2분과에서는 효율적 시장형성 부문을 다루게 되는데 금융기관 부실 자산 정비방안, 금융기관 건전감독 강화 등의 주제가 다루어질 것이다. 제3분과에서는 이용자를 위한 시장기능의 정상화를 주로 다루게 되는데 여신관리제도 개선, 해외금융 이용관련 규제완화 등이 다루어질 것이다. 제4분과에서는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다루게 되는데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금리 및 수수료의 자유화 등이 다루어질 것이다. 제5분과에서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주제하에 금융기관 신규진입 기준의 명확화, 각 금융기관의 업무확대 등이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2) 금융개혁의 주요 이슈들

이번에 추진하는 금융개혁의 주된 이슈로는 정책금융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한국은행의 통화조절능력 확대 문제, 은행 및 서울 소재 3투신의 소유지배구조 문제, 은행의 대형화 추진과 합병 문제, 금융산업내에서의 겸업화의 범위와 겸업형태 문제,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강화와 부실 금융기관의 처리문제 등을 들 수 있다.

그동안 한국은행의 통화운용정책은 통화가치의 안정이라는 본원적인 중앙은행의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경제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에 필요한 자금공급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금융 지원창구로 전락하여

그 본래의 기능이 크게 위축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이는 한국은행의 본원통화 공급 가운데 정책금융적인 성격을 가진 자금이 본원통화 공급량의 약 40% 내외에 달한다는 사실에서 잘 나타난다.

이러한 통화공급 체계하에서는 한국은행이 간접통화관리 방식보다는 RP규제나 통화안정 증권을 통한 직접개입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금융시장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번 기회에 한은 재할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정책금융 자금을 재정으로 이관하고 한국은행은 본래의 통화가치 안정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정책금융의 재정이관은 정부의 재정적자 요인으로 작용하여 정부로서는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이번 기회에 왜곡되어 운용된 정책금융을 바로잡고 실제로는 적자이나 표면적으로는 거의 균형상태에 있다고 발표되는 재정수지의 왜곡도 시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번 금융개혁 논의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의 하나는 시중은행의 소유구조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시중은행의 소유구조는 동일인이나 기업이 은행지분의 4%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다만 금융전업 기업가는 시중은행의 지분을 12%까지 소유하여 지배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전업 기업가는 까다로운 자격요건으로 인하여 전무한 형편이며 따라서 현재 시중은행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경영주체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현재 모든 시중은행에는 은행장 이하 임원들이 있으나 이들이 적어도 소유지분 측면에서 보았을 때나 주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견해에서 볼 때 진정한 은행의 주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은행경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은행의 주인을 찾아주어야 한다는 논의는 지속되어 왔다.

은행의 주인 찾아주기 문제는 과연 은행의 주인과 경영 효율성에 직접적인 因果관계가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와 은행의 주인을 찾아준다면 누가 은행의 주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시되어 왔다.

前者의 논의의 초점은 우리 은행의 경영 효율성이 저하된 근본적인 원인이 은행에 주인이 없어서였는지 아니면 은행경영에 정부규제가 과다하였기 때문이었던지를 구분하는 일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양자의 문제는 분리될 수 있는 문제라기 보다는 주인이 없어서 경영 효율성이 떨어졌으며 또한 주인이 없기 때문에 과다한 규제도 가능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은행의 주인을 찾아준다면 과연 누가 은행의 주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시장원리에 맞긴다면 대규모 기업집단, 소위 재벌이 은행의 주인으로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재벌의 은행소유는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은행을 재벌의 私金庫化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강력히 제기된다.

가뜩이나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따른 弊害문제와 국민정서상의 우려가 심각한데 은행마저 재벌이 소유하게 된다면 이는 곧 경제력 집중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현재 재벌이 이용하는 업종의 대폭적인 축소, 주력업종의 분리매각, 재벌자체의 소유분산 및 제2대와 3대 대주주의 합이 1대 대주주의 지분을 상회하도록 하는 등의 은행소유의 분산 등을 전제로 한다면 경제력 집중문제에 의한 부작용 문제는 일정부분 완화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변할 수 있다는 문제는 은행감독원의 건전성 규제강화와 감독강화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여진다. 물론 이렇게 하

는 것이 재벌의 은행소유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모두 해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은행의 주인이 계속 없을 때의 부작용과 98년 이후에는 경영주체가 확실한 외국은행의 국내진출이 본격화된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은행에 주인이 있을 때의 부작용과 은행에 주인이 없을 때의 부작용이 상대적인 크기에 관한 논의가 광범위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유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서울소재 3대투신의 소유문제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은행이 정부의 제1금융권에 대한 통제장치였다면 투신은 제2금융권에 대한 통제장치로서의 역할을 하였던 곳이다.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여 지원하기도 하였던 중앙소재 3대투신은 현재 과다한 정부개입과 주가하락으로 인하여 매우 부실한 위치에 처해 있다. 그러나 향후 증권산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장차 우리나라의 증권회사도 미국식의 대형 투자은행을 지향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향후 거대 투신의 향방은 매우 중요하다. 부실화되어 있는 투신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투신의 소유문제에 관해서도 명확한 정리가 필요한 분야이다.

다음으로 최근 금융기관간의 합병문제가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금융기관간 합병은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형화를 추진하는 방안으로 추진되기도 하고, 부실한 금융기관을 정리하는 방편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현재 은행 합병문제는 두가지 측면에서 모두 고려되고 있으며 증권사나 보험사의 경우에는 주로 후자의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증권이나 보험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각자가 알아서 처리할 문제이며 정부역할은 합병의 유인을 제공하고, 합병이나 기업인수시 소비자를 보호하며 또한 합병 등에서 파생될 수 있는 금융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는 일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 될 것이



다. 현재 합병과 관련하여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은행분야이다.

은행의 경우에는 미약한 경쟁력, 규모의 영세성의 측면이나 부실화의 정도로 볼 때 은행간의 합병은 필연적으로 여겨지나 합병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세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정부주도에 의한 강제합병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소유 은행의 경우는 예외로 치더라도 시중은행의 경우 진정한 합병의 주체없이 정부주도에 의해 합병이 이루어진다면 합병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거나 합병후의 경영효율성 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반면 서로 다른 기관의 물리적 합병에 따른 부작용과 합병에 따른 특혜문제, 부실채권의 처리문제 등 엄청난 후유증을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번의 금융개혁 과정이나 정부주도에 의한 정부관련 은행간의 합병은 가능할 수 있으나 기타 은행간의 합병을 강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이외에도 타업종 진출방식으로서 지주회사의 도입 문제, 부실금융기관 처리문제, 금융기관의 진입규제 완화문제, 자본자유화의 가속화를 포함한 대외개방

확대문제, 건전성 감독과 금융규제와의 조화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이다.

3. 예상되는 금융개혁 방향과 영향분석

(1) 예상되는 금융개혁 방향

금융개혁의 기본방향은 금융산업에 대한 정부규제의 완화로 요약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개혁은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금융산업 내에서의 겸업화 경향을 촉진시키고, 금융기관의 경영과 자산운용에 관한 직접적인 규제를 완화하여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 및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또한 금융산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경쟁을 유도할 것이며, 경쟁격화로 인한 금융기관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건전성 감독강화 등의 조치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족된 금개위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한다기 보다는 이제까지 제시되었던 각종 금융개혁안 중에서 개별 사안에 대하여 속도를 가속시키는 역할에 제한될 가능성이 많

다. 금융 빅뱅을 야기할 근본적인 사안에 관하여 어떤 구체적인 안을 선택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를 추진할 강력한 리더십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비록 금개위의 활동이 빅뱅식의 개혁은 아닐지라도 기존에 추진하던 금융개혁의 속도를 앞당기는 조치만으로도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은 많은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금융개혁 조치들의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각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규제가 대폭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금융상품의 만기와 최저단위 등에 관한 규제완화, 금융기관 내부경영에 대한 규제 완화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주목할 점은 금리자유화, 증권회사의 위탁매매 수수료율, 신탁의 중도해지 수수료율 등의 가격규제의 자유화이다.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완화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생보사에게만 부여하던 중업원의 퇴직보험금에 대한 손비처리를 은행이나 신탁으로 확대할 것이 발표되었고 증권회사도 제한적이거나 CP 등의 단기금융 업무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보험에도 실적배당 상품인 변액보험이 허용될 예정이다.

금융산업에 대한 진입규제도 대폭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종금사나 증권회사의 은행전환 허용 가능성이 발표된 바 있고 증권회사의 최소 설립자본금을 대폭적으로 낮추는 방식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부분 외에도 금융신상품 개발,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규제, 예금자 보호제도 등의 금융건전성 유지조치, 현재 은행·증권·보험으로 분리되어 있는 감독원의 통합문제, 외국환 은행제도, 시가회계 도입문제, 타업종 진출방식 문제, 파생상품 회계처리 문제, 부실채권 처리 방안, 금융실명제 등 금융관련 제반사항들에 대한 폭넓은 검토가 이루어질 것

이다.

(2) 예상되는 금융산업의 변화

먼저 모든 금융산업에서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외국은행의 현지법인 설립이 허용되고 증권산업에 대한 외국합작기업의 참여가 허용되며 외국생보사의 국내진출시 경제적 수요 심사가 폐지됨으로써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이 대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내적으로 볼 때에도 증권회사의 설립요건의 대폭적인 완화라든지 5대 재벌의 생보사 참여확대 등은 경쟁을 격화시킬 주요 요인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금융기관 수의 양적인 증대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특히 금리나 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대폭적으로 완화될 것이므로 치열한 가격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금융기관 사이의 경쟁 격화와 함께 금융기관의 부실화 가능성도 대폭 증대된다. 이는 금융산업 내에서의 경쟁 격화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의 전체적인 구조 조정과정에서 부도기업이 증가하거나 계열기업의 파산으로 인하여 금융기관까지도 부실화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기관의 경쟁 격화가 수익성 증대를 위한 과도한 유가증권 투자로 연결되는 경우 이러한 분야에서의 투자 실패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부실화될 수도 있다.

특히 파생금융 상품을 본래의 헤지 목적보다는 중요한 고수익원으로 과도하게 활용하는 경우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외국 금융기관의 영향력이 대폭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금융기관은 이미 자본력과 뛰어난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시장을 잠식해 오고 있으며 이들의 영향력은 시간이 갈수록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각기

전문화와 대형화의 길을 선택하도록 요구받을 것이다. 자본력과 영업 노하우가 뛰어난 대형 금융기관들은 외국 금융기관을 경쟁상대로 해서 특히 도매금융 분야의 복합서비스 제공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금융기관들은 틈새시장에서 자신의 전문분야를 더욱 공고히 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다. 금융기관들의 전략적 제휴도 매우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다.

향후 단종 금융기관의 위상은 급격히 하락할 것이며 금융수요자의 다양한 니즈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금융그룹이 출현하고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그룹을 형성하지 못한 금융기관 사이에 전략적 제휴가 급속히 증대될 것이며 전략적 제휴의 상대는 국내 기관만 아니라 외국 금융기관으로 확대될 것이다.

4. 금융개혁과 기업의 대응방안

금융개혁의 1차적인 수혜자는 기업이 될 것이다. 금융개혁은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금리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금리의 하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개혁의 점진화 진전과 각종 금융 규제완화는 기업들로 하여금 one stop banking을 가능하게 하여 거래비용을 절감하면서 각종 금융니즈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준다.

금융개혁은 기업들의 자금조달 및 운용방법을 보다 다양화하게 할 것이다. 이는 국내 금융시장 이용에 대한 규제완화는 물론 국제 자금시장에서의 자금차입이나 운용에 대한 규제도 완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개혁과 이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화는 기업들에게 또다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먼저

금융산업의 경쟁 격화와 금융시장의 대외 개방확대는 필연적으로 금융시장에서의 주요 가격변수인 금리나 환율, 주가의 변동성을 증대시키고 예측 가능성을 과거보다 저하시킬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로서는 더욱 이러한 가격변수의 움직임에 주목하여 예측 능력과 위험분산 능력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의 부실화 가능성 증대는 거래 금융기관의 부실화 가능성을 동시에 증대시킴으로써 이로 인하여 기업이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우량금융기관에 대한 선별과 이에 따른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 통합화가 필수적인 것이다. 또한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강조되어 금융기관들은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가격이나 자금 가용성면에서의 차별을 대폭 확대할 것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자금의 가용도는 과거보다 수월해질 것이지만 이는 신용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이고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경우에는 자금 가용성이 과거보다 더욱 위축되는 소위 자금시장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국내 금융시장의 개방이 확대되면 국내외 금융시장의 연계성이 증대될 것이다. 또한 국내기업의 해외에서의 자금조달이나 해외로의 자금운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보다 더 해외 금융시장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에게는 국내 자금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 자금시장에 정통한 인력양성이나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금융산업이 규제되고 정부의 보호하에 있던 경우에는 금융산업에 대한 진출이 곧 새로운 수익의 창출원이라는 인식이 있었고 또한 계열 금융기관을 이용하면 다양한 부수적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고 여겨졌으나 새로운 금융 환경하에서는 금융산업에의 진출이 반드시 이익이 증대하는 등식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A